

보 도 자 료

보도

2017. 5. 24(수) 조간부터

배포

2017. 5. 23(화)

책임자

사회안전망연구실
정성희 실장(3775-9024)

작성자

이태열 선임연구위원(3775-9010)

홍보담당

변철성 수석역(3775-9115)

총 4매

제목 : 보험연구원 『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현안 과제』 보고서 발간

- 보험연구원(원장 한기정) 이태열, 최장훈 연구위원과 김유미 연구원은 『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현안 과제』 보고서에서 공적, 사적 부문을 포괄한 복지 관련 현안 과제를 논의함
-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과 관련해서 ① 거시적 복지 부담 능력, ②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, ③ 국민건강보험 요율 체계, ④ 퇴직연금의 지급 안정성, ⑤ 실손의료보험의 공·사 협력 등 총 5개 주제가 검토되었음
- 우리나라는 미래의 복지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국민 부담을 인상하는데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으며, 동시에 복지 부담의 형평성 개선과 사적 부문의 효율성 제고에도 노력하여야 한다고 주장되었음

□ 보험연구원은 24일(수) “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현안 과제”란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함.

- 우리나라의 복지 문제를 거시적 부담 여력, 공적 부문(국민연금, 국민건강보험), 사적 부문(퇴직연금, 실손의료보험)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현안 과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함.
- 우리나라의 미래 복지 부담은 빠르게 증가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되겠으나, 이를 감당할 거시적 경제 여력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.
- 국민연금은 점진적 요율인상이 시급하며, 국민건강보험은 소득 중심의 요율 체계 일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.
- 퇴직연금은 지급 안정성을 보다 강화해야 하며, 실손의료보험은 공·사 협력을 통해 총 의료비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함.

거시적 복지 부담 여력은 긍정적

- 우리나라가 OECD 국가의 평균적인 국민 부담을 감당한다면 미래의 복지 비용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 - 정부는 현재 복지 체제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 복지지출비중은 2014년 9.7%에서 2050년과 2060년 각각 23.7%와 25.8%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함.
 -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(GDP 대비 조세+준조세)은 24.6%로 OECD 평균 34.2%보다 크게 낮은 수준임.
 - 우리나라 국민이 2014년 OECD 국가의 평균 국민부담률을 감당한다면 재정적자 GDP대비 3%* 가정 시 GDP 대비 26.0%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을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* EU 회원국들에 적용되는 재정 건전성 기준인 재정적자 GDP 대비 3% 적용하였음.

국민연금, 현세대부터 요율 인상 시급

- 국민연금은 '내는 것에 비해 많이 받는 구조'에 따른 고질적인 재정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요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음.
 - 수익 규모(총급여액 - 총납입보험료)를 기준으로 할 때, 상대적으로 가장 유리한 세대(30년 가입기준 47~67년생, 25년 가입기준 50~64년생)가 이미 은퇴 연령에 들어섰음.
 - 따라서 국민연금의 요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면, 가장 많은 수혜를 받는 세대가 모두 은퇴하기 전인 현재부터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.

국민건강보험, 요율 체계 일원화 지속 추진 필요

- 국민건강보험 요율 체계는 최근 개편안에도 불구하고 직장-지역 가입자 간 이원화된 체제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일원화 정책이 필요함.

- 최근 확정된 국민건강보험 요율 체계 개편안은 2022년이 되어야 최종 단계가 시행되는 중장기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직장 - 지역 가입자 간 이원화된 체제*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형평성 개선에 한계가 있음.

*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지만, 지역가입자는 소득, 재산,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부과함.

- 우리나라와 같이 동일한 건강보험의 가입자에 대해서 완전히 이원화된 부과 기준을 적용하는 해외사례는 발견하기 어려움.
- 소득 중심의 요율체계 일원화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추가적인 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.

퇴직연금, 지급안정성 강화 필요

□ 퇴직연금은 기금이나 기업 파산 시에도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보장되는 지급 안정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- 퇴직연금은 그 간의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비교 시 여전히 지급 보장의 측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판단됨.
-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선진국과 같이 별도의 퇴직연금 지급보장기관을 설립하거나, 기업 파산 시에도 법적으로 우선 보장하는 퇴직급여를 현행 3년치에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.
- DC형 퇴직연금의 원리금 보장을 위해서는 은행의 예금과 같이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 자산을 분산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거나 예금자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*할 필요가 있음.

* DC형 퇴직연금의 예금자 보호 한도 : 미국 10만 달러, 일본 1천만 엔, 캐나다 10만 캐나다 달러, 한국 5천만 원

실손의료보험, 공·사 협력을 통해 전체 의료비 관리의 효율성 제고 필요

- 공·사 건강보험은 전체 의료비 관리 차원에서 상호 윈 - 윈하는 협력 관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.
 - ‘실손의료보험이 공적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킨다’는 공적건강보험의 인식은 상호 발전적인 협력 관계 구축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.
 - 실손의료보험은 공적건강보험에 추가적인 보장을 하는 보완적 역할도 하지만, 공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진료를 보장하는 대체적인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에 상호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상병별로 매우 복잡하게 나타남.
 - 공·사 건강보험은 정보 교류를 통해 의료과소비가 발생하는 부문을 상병별로 파악하고, 전체 의료비 관리 차원에서 합리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임.

<별첨> 『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현안 과제』 요약자료 및 보고서 각 1부. 끝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kiri.or.kr>